

정식 대부업이 급전 미끼로 '내구제대출' 권유... 피해 속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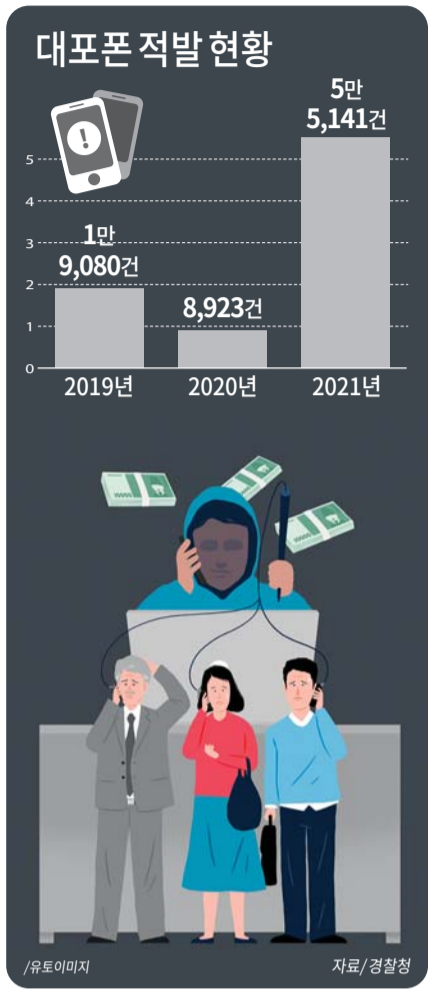
금융 취약계층에 불법대출 추천 폰 개통하게 한 후 공기계 요구 요금폭탄 떠안은 피해자 쇠고랑도 관리 감독 허술에 피해 증가 우려

“고객님께서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개통하시면 개인정보가 담긴 유심칩은 현장에서 드리고, 공기계만 매입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드려요. 통신법에 따라 당일 2대 만 개통이 가능하니까 170~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문의해도 대출한도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신용조회 마시고, 이 상품으로 진행하세요.”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권유하고 있다.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정식 등록 대부업체 확인'만 강조하고 있어, 이를 믿고 거래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체 등록만 확인했는데”... 불법대출에 금융취약층 피해 ↑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불법대출인 '내구제대출'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하는 대출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교묘하게 내구제대출을 권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본인명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공계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부업체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계를 매입해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 반면 소비자는 매달 통신사에 시가로 구매한 휴대폰 값을 내야 한다.

실제로 기사가 대부중계사이트에서 대출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자 10곳중 2곳이 통신요금 미납여부만 확인한 뒤, 내구제 대출을 권했다. 대부업체명과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해보니 이들은 모두 대부업 법령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친 정식등록 대부업체였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예방대책이 취약계층을 불법대출로 내몰 수 있다는 것.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대출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대출 이용 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와 정식등록 대부업체를 조회한 뒤 거래하라고 당부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인 것만 믿고 이들이 제시하는 상품을 이용해 불법대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직업, 소득, 신용등급 등을 보기 때문에 저신용자나 금융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은 통신요금 미납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대부업체 내구제대출이 훨씬 대출 문턱이 낮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금융 취약층을 중심으로 등록 대부업체만 확인한 뒤 그들이 제시한 상품을 이용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내구제대출, 피해자라도 처벌 불가피

특히 내구제대출은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체에서 내구제대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휴대폰 등 실물거래를 동반한다는 이유로 대부업법에 따른 소비자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내구제대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휴대폰 등 실물거래를 동반하기 때문에 구제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기관에 민원을 넣어 구제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하면 등록기관이 금융감독원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등록기관에 민원을 넣어 구제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는 것.

내구제대출로 공계기와 유심을 함께 팔아 대포폰으로 이용된 경우 처벌도 피하기 어렵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제97조 제7호는 이동통신서비스가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자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내구제대출과 관련한 별도 통계는 없지만, 대포폰 적발 현황은 2019년 1만 9080건에서 2020년 8923건, 2021년 5만 5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피해자도 자신의 명의를 넘긴 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구제대출을 추천하는 이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예방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수민 이사장은 “휴대폰 공계를 매입하는 대리점은 내구제대출인지 알면서도 방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찰단속이 뜨거나 주의경보가 뜰 때 잠시 움츠렸다가 진행되는 만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횡령 막아라”... 감시인력 ↑, 장기근무 제한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

앞으로 금융 사고 위험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방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함께 운영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혁신방안 주요내용으로는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등이다.

또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을 위해 ▲준법감시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등을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들이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은행의 준법감시 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선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업무 중사 경력 2년 이상이 추가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비중도 20%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

-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하고 장기근무자 명령휴가 확대 등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 추진
- 은행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내부고발자제도 익명성 강화

명령휴가 대상자도 대폭 확대한다. 영업점에 몰려있던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혹은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명령휴가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위험직무자나 장기근무자는 강제로 연 1회(회당 1~3영업일) 명령휴가를 가야 하고, 불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등록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거래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한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 제도는 익명성을 강화하고 대상행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부고발자 제도는 지난해 20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신고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다. 이에 실명신고 원칙을 삭제하고, 익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내규 불비사항'도 고발대상에 추가했고, 3억원 이상의 금전사고를 고발하지 않

으면 반드시 조사·제재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시스템 접근통제도 고도화한다.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확대하고, 시스템 인증수단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또 자금인출 시스템 연계를 의무화해 단계별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그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금감원이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이창용 한은 총재, BIS 총재회의 참석

세계경제 리스크·불확실성 등 논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중앙은행 총재들과 함께 세계경제 리스크 등을 논의한다.

한은은 이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해 9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총재는 6~7일 중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 등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의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BIS 이사 자격으로 ‘BIS 이사



회(Board of Directors)와 ‘경제자문위원회(Economic Consultative Committee)’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8일에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되는 스위스 중앙은행(SNB)-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BIS공동주최 고위급 컨퍼런스에 패널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학계 인사들과 세계경제 리스크 및 불확실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불경기에 소비위축... 9월 개인카드 금액 ↓

76.4조... 7월 대비 9000억 줄어

지난 9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8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법인카드의 승인 금액은 증가했지만 불경기로 인해 개인카드 승인 금액이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승인 금액 또한 떨어진 모습이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전체 카드 평균승인 금액은 95조3000억원으로 7월 전체카드 승인 금액인 94조5000억원 대비 2000억원(0.21%)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개인카드의 승인 금액은 76조4000억원으로 7월, 77조3000억원 대비 9000억원 줄었다. 반면 법인카드 전체 승인 금액은 18조 2000억원에서 9월, 18조9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모두 사용량이 8월 대비 위축했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둔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카드 소비의 경우 8월 건 당 4만2062원에서 9월 4만3354원(3.1%)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승인 건 수가 감소하면서 위축된 소비 행태를 보이는 것. 반면 법인카드 평균 승인금액은 지난 8월 건 당 13만8835원에서 9월 15만272원(8.2%)으로 상승했다. 3분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세금 및 기타 부대비용 투입에 사용했을 것이라 해석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은 8월 승인금액 50조3300억원에서 9월 50조2500억원(-0.15%)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